

경찰에 ‘48시간 구금권’ 준다는 여당

논란의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
긴급체포, 검사 승인→통보로 전환
경찰 자체판단, 48시간 구금 가능
법조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
법사위, 논란 커지자 재검토 논의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54)는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인적사항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제공한 상황이 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도 확보해 놓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긴급체포서를 받아 A씨의 범죄 사실과 체포 사유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A씨를 석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면서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기엔 긴급한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 A씨가 체포된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 앞이었다. 귀가하는 길에 집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사의 승인 제도가 없었다면 A씨는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번 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검사의 긴급체포 승인 권한 삭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

송법 개정안엔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사 승인에서 통보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땐 경찰이 통제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체포해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에 검찰이 제동을 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강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특정하고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0대 B씨의 거주지로 집행을 나갔다. 경찰은 B씨 자택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 등 6명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였는데, B씨 외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자 검찰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해명)는 “사후 통보는 48시간 동안 경찰 마음대로 잡아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부당한 체포를 지금까지 검사가 풀어줬다면, 앞으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백 수단으로 긴급체포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가 구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 놓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긴급체포를 남용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진호·김성진 기자

» 5면 ‘구금시대’로 계속



국힘 시한폭탄 권영진, 정점식에 ‘먹살’ 사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의 먹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이 27일 사과한 뒤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 정계 철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8면 [연합뉴스]

The JoongAng Plus 이철재의 밀담 » 18면

“계엄 주도한 육사 힘빼기”...사관학교 통합, 위험한 도박

빚 연체기록 지워줬더니, 6명 중 1명 또 연체



지난해 말 대출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 292만8000명 가운데 48만3000명이 올해 들어 다시 연체를 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6명 중 1명꼴(16.5%)로 재연체를 했는데,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빚을 갚고 재기할 능력이 있는 이들을 정부가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관계기사 4면

397억원 걸린 윤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대법 확정 땐 국힘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가 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해서 적극 다룰 것”이라고 밝힌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수빈·최서안·류효림 기자

» 5면 ‘윤석열’로 계속

아이오펜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피부과* 스킨부스팅 관리 동급의 물광 탄력 효과

*건강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함
CLINICAL GRADE: 인체 적용 시험에 한함

